

“검수완박, 위헌소지 상당... 조국 수사는 과잉 아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검찰 수사권, 檢 아닌 국민의 것
부패한 정치인 등 처벌 어렵게 해”

“74년 중대범죄 수사 자산 국민 것
법안 처리엔 국민 자산 잃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부터 본질의까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방지 이익을 보는 국민의 것”이라며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성을 섞기도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가 됐었을 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법

이 진행되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 알지 못해서 범조에 있는 사람이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지휘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민 의원의 물음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조 장관을 겨냥해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으로 수사팀을 공격하고 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한 후보

자는 “조국 사건은 사과할 것이 아니고 본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내부에)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이 계셨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지 않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민 의원이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했나”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번 법안 처리로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가 중대범죄 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후에 제한돼 산업기술보호에 취약해졌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기술유출에 대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쌓아왔다. 검찰의 수사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74년에 걸쳐 쌓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자산은 검찰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기업에서 노트북을 받아 복지관 기부한 것과 논문 표절, 대필 정황 등을 포함한 자녀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좌천돼 있을 때 이뤄진 것이라는 잘 모르겠다”며 “논문 수준의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영문 글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이 없다. 나아가서 학교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글들”이라며 “제 딸이 국제 학교에 다니는데 자기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관 노트북 기부 건에 관련해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3년 정도 이어오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 활동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다”며 “아동시설에 노트북이 부족해서 자기 노트북을 구해서 주다가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폐기될 것이 취약계층에 쓰이면 좋은 것이 아닌가. 장려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회피 및 제척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의 공방으로 파행돼 오후 2시에 속개된 청문회부터 질의가 시작됐다.

/박태훈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기재부 1·2차관에 방기선·최상태, 외교부에 조현동

尹 정부,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 “공백 없도록 취임즉시 발령 진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새 정부 15개 부처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 취임 후 즉시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방기선(57)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차관에는 최상태(57)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운(52)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61)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장이 발탁됐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62) 유엔 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가, 2차관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했던 이도훈(60)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내정됐다.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52)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한창섭(55)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55)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병국

(59)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인종(54) 농림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장영진(56)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54)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조규홍(55)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2차관에는 이기일(58) 복지부 보건료정책실장이 내정됐다.

환경부 차관에는 유제철(5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기섭(53)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발탁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원재(5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상근(54)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53)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추가 인선도 발표됐다. 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에 강익구(55)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국방위, 만장일치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 4일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5일 만에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국회 청문회를 마친 윤석열 정부 내 각 후보자 13명 가운데 다섯 번째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이기도 하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보고서에서 국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 “39년 간의 군 복무 기간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국방 정책과 군사 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전략적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일부 부족함이 지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방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사청문과정에서 지적된 점을 유념해 부단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尹 정부, 反 문재인 정부 아닌 시민의 정부 돼야”

여영국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반(反) 문재인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영국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그것을 뛰어넘을 더 좋은 다음 정부를 불러낼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더 좋은 다음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치는 더욱 다양하고 좋은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나설 것”이라며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후진적인 정

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고 시민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기에 정의당은 시민의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꾸짖는 시민들이 탄생시킨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새로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숙주 삼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구호를 국민을 키울 윤석열이라는 책임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선 당시의 반 문재인 정책 중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소수자 등의 삶을 위태롭

게 할 위험한 공약들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대표해 마땅히 지지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담아야 한다”며 “당장은 시민들께서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국무위원을 고집하는 불통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청와대 이전과 내각 지명 이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새 정부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엄중히 받아 들여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시민의 정부가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첫 관문을 잘 통과하길 바란다”고 부연



여영국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했다. 여 위원장은 “시민의 정부는 통합의 정부이기도 하다”며 “지난 대선에서 0.73% 격차는 그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마땅히 윤석열 정부는 이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